
정책참고자료

2016-2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인천·경기·강원·충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의 연주·전시, 방송사 아나운서 행사 진행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아	12
---	----

3 기획재정부

국가재정 운용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열린재정’ 홈페이지 개편	17
--	----

4 교육부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19
----------------------	----

5 미래창조과학부

부처합동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발표	24
-----------------------------	----

6 문화체육관광부

가을여행주간, 전국 주요 관광지 관람객 증가	36
--------------------------	----

7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대표 수리취떡, 6차산업화를 통해 향토음식 가치 확산!”	41
------------------------------------	----

8 환경부

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 ‘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 박차	46
---	----

9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와 휴가제도, 우리회사도 이제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_____ 54

10 여성가족부

수능 전후 청소년 상담 및 보호활동 집중 전개 _____ 57

11 국토교통부

이상기후 대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준비 끝! _____ 62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해양수산시설 겨울철 재난 대응 대책 추진 _____ 67

인천·경기·강원·충남 일부지역 가뭄에 대비해야

- 국민안전처,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경기·강원·충남 일부지역은 강수량이 다소 적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1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보면,

○ 11월 현재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1,036.1mm)의 86%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천 및 경기남부(이천, 안성, 여주), 강원영서(원주, 횡성) 일부지역과 충남 보령은 강수량이 평년의 60% 미만으로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 (생활 및 공업용수)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56.5%)은 평년(57.9%)과 비슷한 수준이나,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 (농업용수)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70%)은 평년(78%) 보다 낮은 상황이며,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수요는 없지만 저수율이 낮은 경기·충남 일부지역 5개 시·군(안성, 보령, 서산, 홍성, 예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 1개월 전망

- (기상가뭄) 11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46.7mm)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인천·경기·충

남·강원영서 일부지역(37개)은 강수 부족으로 당분간 주의단계의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생활 및 공업용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용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충남 일부지역 5개 시·군(안성, 보령, 서산, 홍성, 예산)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개월 전망

- (기상가뭄) 향후 3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99.5mm)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인천·경기·충남·강원영서 일부지역(37개)은 주의단계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생활 및 공업용수)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의 가뭄상황은 심함단계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농업용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충남 일부지역 4개 시·군(안성, 보령, 서산, 홍성)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국민안전처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은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실태 및 가뭄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역인 충남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댐·저수지의 선제적 용수감량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하고, 용수공급체계 조정 검토 등 장기 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 농업용수 가뭄 예상지역인 경기·충남지역 5개 시·군에 대해서는

- 내년 영농기의 농업용수 부족상황이 우려되므로 저수지 물채우기,

용수원 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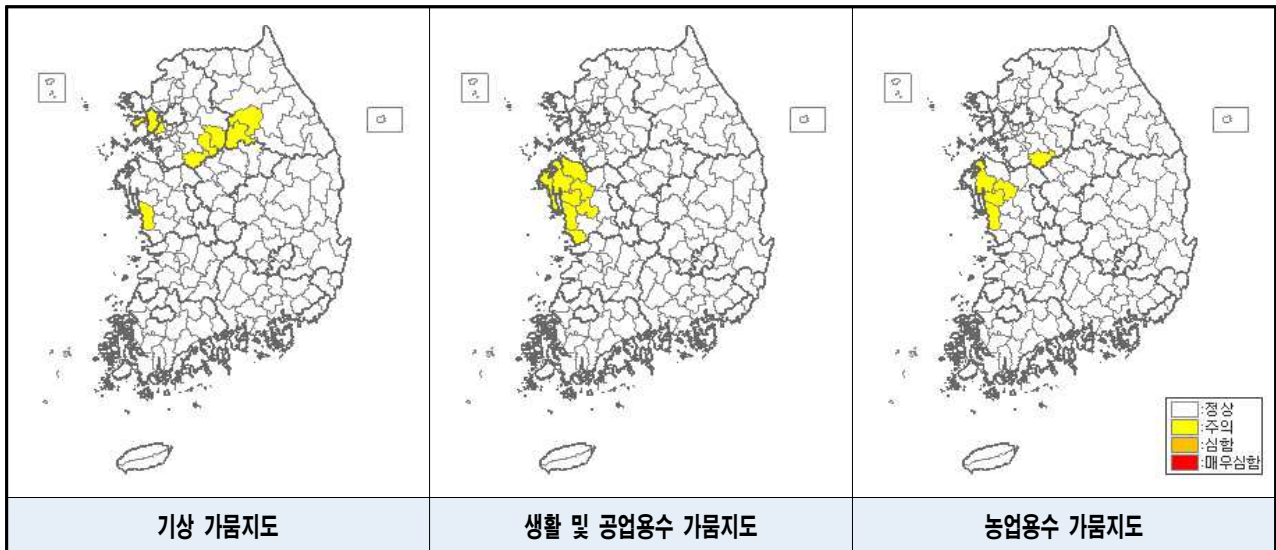
- “국민들도 가뭄 극복을 위해 평상시 생활 속 물 절약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1월 가뭄 예·경보

제 2016-9호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2016년 11월 10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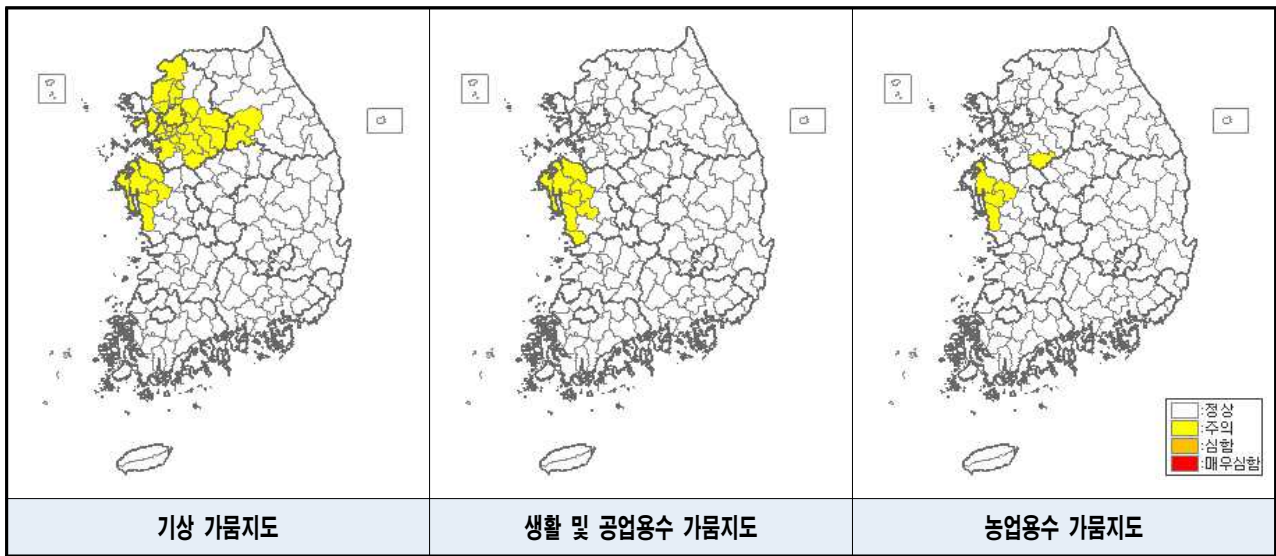
■ 11월 현재



구 분	기상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농업용수 가뭄
주 의 (Yellow)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 안성시, 여주시, 원주시, 횡성군, 보령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안성시,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심 함 (Orange)	-	-	-
매 우 심 함 (Red)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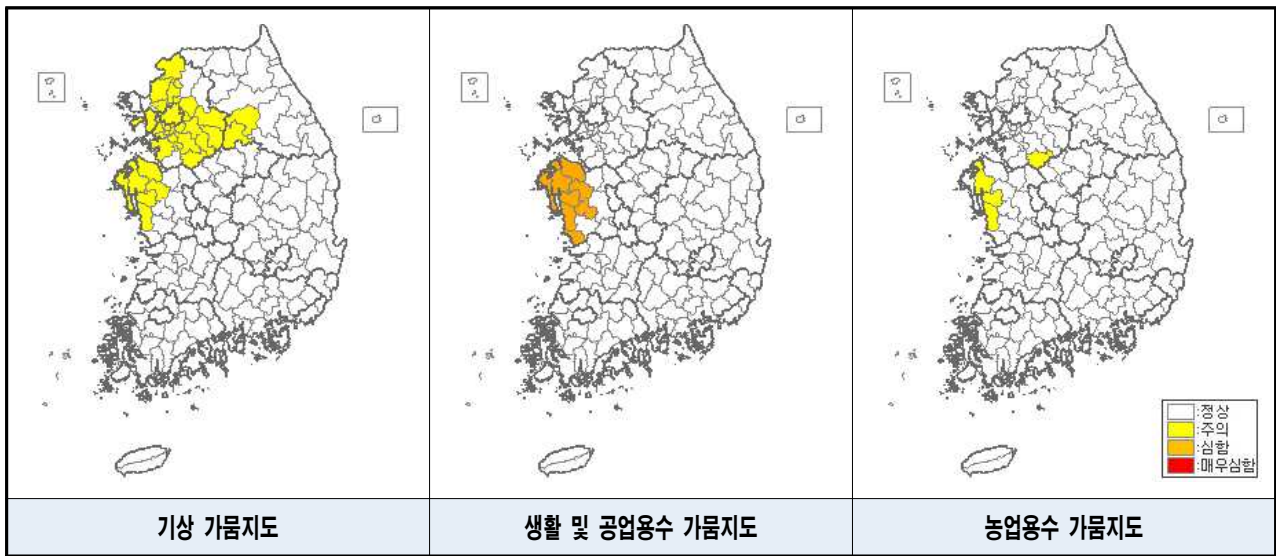
* 지방·마을상수도 운반·제한급수 현황 : 인천 옹진군 도서지역 6개 마을 1,480세대

■ 1개월 전망



구 분	기상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농업용수 가뭄
주 의 (Yellow)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원주시, 횡성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안성시,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심 함 (Orange)	-	-	-
매 우 심 함 (Red)	-	-	-

■ 3개월 전망



구 분	기상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농업용수 가뭄
주 의 (Yellow)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원주시, 횡성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안성시,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심 함 (Orange)	-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매 우 심 함 (Red)	-	-	-

* 보령댐 관련 8개 시·군 '심함'단계 도달시 급수체계 조정 및 보령댐 도수로 가동 등 대응

참고자료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구 분		가뭄 상황	부처 조치사항
농 업 용 수	주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 유관기관별 장비 점검·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 물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국민안전처)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매우 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 저수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 관정개발·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생 활 및 공 업 용 수	주의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상황별 비상·대체급수 점검(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국토부) ◦ 다목적·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심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취수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 경우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차 등 소방력 동원 급수지원(국민안전처)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대체자원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다목적·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 하천수 취수 일부 제한(국토부)
	매우 심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급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 소방력 광역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환경부, 국토부) ◦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다목적·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댐-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댐·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 하천수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구 분		가뭄 상황	국민 행동요령
농 업 용 수	주의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 용수 절약
	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 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매우 심함	영농기(4~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인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심함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 지하수,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생 활 및 공 업 용 수	주의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가정,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심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취수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 경우	◦ 절수용품 설치하기 ◦ 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매우 심함	하천, 댐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 부족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급수제 한이 불가피한 경우	◦ 국가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2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의 연주전시, 방송사 아나운서 행사 진행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3차 회의 결과 발표

-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11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일 것,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즉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일 것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보았다.
- ☐ 또한, 각종 행사·회의 진행이나 사회, 연주·공연·전시,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시험출제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등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다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11. 18.(금)에 열릴 예정이다.

※ (붙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제3회) 결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제3회) 결과

□ 연주·공연·전시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행사 진행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열린재정’ 홈페이지 개편

-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 개편을 통해 11.8.부터 대한민국 전체 예산 모습(신설), 맞춤형 재정 지원 안내 및 보조금 비교 공개(개편) 등 재정정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확충하였다.
- (대한민국 전체 예산 모습) 그동안 재정정보 공개는 ‘열린재정’(국가재정), ‘지방재정365’(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알리미’(교육재정)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원하는 재정정보를 찾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불편하였으나,
 - 이번 개편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이전 재원 현황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었고, 도표 등을 활용해 시각적인 효과도 제공하게 되었다.
 - * 기획재정부에서는 ‘열린재정’ 홈페이지 개편에 앞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16. 10. 18.공포)하여 지방(교육)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근거 마련.
(2016. 10. 11.기보도)
- (맞춤형 재정 지원 안내)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재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 정보를 단순히 업데이트 하는데 그치지 않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정보를 망라*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업 분류체계(생애주기별, 대상별, 주제별 분류) 등을 대폭 개선하였다.
 - * 사업수 : 총 2,381개 사업(국가 재정사업 1,420개 + 시·도비 보조사업 961개)
- (보조금 비교 공개) 또한, 공개 대상 국고보조 사업 수를 확대(9개

기관 35개 사업→ 15개 기관 45개 사업)하고,

- 국고보조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사업 재정정보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로 비교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선보인 재정정보 콘텐츠를 이번 열린재정 개편에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공개하게 되었으며,

- 앞으로도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 주요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비교·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하반기 ‘정부3.0 국민체험마당’(11.9~11.12, 부산 벡스코)에서도 ‘한 곳에서 한 눈에 보는 대한민국 열린재정’을 테마로 설정하여 이번에 개편한 ‘열린재정’을 선보이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의 “알기쉬운 재정”, “국고보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 교육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학교예술교육 우수 사례 발표 -

- ◇ (사례1 : 학생) 초등학교 5학년 지현이는 올해부터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피아노와 기타 연주를 배운다. 악기 연주를 가르치는 학원도 교사도 없는 산골 마을에서 한 번도 악기 연주를 배워본 적이 없었던 지현이는 학교로 찾아오는 예술가들로부터 다양한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있어서 요즘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신난다.
- ◇ (사례2 : 교사) K교사는 작년에 학생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서 강사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이 불편한 시골 학교에 강사가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에는 교육지원청이 구축한 ‘지역예술교육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 악기 강사를 비교적 쉽게 섭외할 수 있었다.
- ◇ (사례3 : 지역사회) 읍내에서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시골 마을 학교에는 토요일마다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진다. 88세 할아버지가 14세 소년에게 기타를 배우고 40대 아주머니는 선생님과 함께 첼로의 활을 잡는다.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의 후원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운영 중인 이 학교는 인근 초등학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악기 교실을 열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학교가 가진 교육자원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예술로 하나 되는 협력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부는 11월 11일(금), 전국의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번 우수사례는 교육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발굴되었다.
 -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 지역 주민 등 지역사회가 학교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시범교육지원청을 지정·운영하고,
 - * 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활성화시범교육지원청 100개 운영('16년)

- 지역사회의 예술전문가,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현장에 필요한 예술교육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 우수사례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온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예술교육활동 성과들이 담겨 있다.

[교육지원청의 운영 우수 사례]

- 교육지원청은 지역예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자원 발굴, 예술전문가의 찾아가는 교육 등
 - 단위학교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고른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운영 우수 사례》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제작·보급 · (부산해운대) 지역예술유관기관 55곳의 관련 정보(동영상, 사진, 교통, 프로그램 등)를 수집하여 지도와 앱(App)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것을 활용한 수업 사례 연구·보급	예술 전문가의 찾아가는 교육 · (충북괴산증평) 지역예술협의체 예술전문가가 15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 · (부산동래) 관내 12개 기관과 학교예술 동아리를 일대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
특색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 (전북김제) 전북어린이연극제를 김제로 찾아가는 연극제로 운영하여 30개 학교 900여명 학생 참여, 교육과정연계 연극 감상 교육 실시 · (인천동부) 지역예술단체의 찾아가는 등곶길 음악회로 현장감 있는 예술 체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어울림의 장 마련 · (강원속초양양) 주민·학부모·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어울림합창단 운영 · (경기광명) 광명시 5개 마을별 협의체를 통해 특색 있는 마을 축제 기획·운영 40개교 1500여명, 지역주민 800여명 참여

[단위학교의 운영 우수 사례]

- 한편, 단위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교육지원청이 구축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 교과서 위주의 예술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감 있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예술교육을 펼치고 있다.

《단위학교의 운영 우수 사례》

1인1악기 개인별 맞춤 교육 · (서울인창고) 지역의 예술전문가를 활용하여 1학년 전교생이 희망하는 악기를 선택, 1인1악기 맞춤 교육을 받고, 5개의 악기로 밴드 팀을 꾸려 문화예술 밴드 경연 축제 실시 · (경북하양여중) 인근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의 1대1 악기교육	교육과정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 (광주동운초)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예술교육활성화로 교육 만족도 향상 · (경기안양여고) 12개 학교가 연합하여 ‘우리 동네’를 주제로 교과융합수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움직이는 미술관 운영
특색 있고 현장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 · (강원진부초) 한국과 프랑스의 전래 동화를 영어로 각색하여 프랑스 초등학교에 방문·공연하는 등 교육 뮤지컬(Educal)로 국제교류 예술교육 실시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연합 오케스트라 · (전남오산초)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시골에서 3학년 이상 전 학생이 방과 후 참여하고 가족오케스트라도 함께 운영 · (경북왕산초) 지역연합오케스트라 운영, 청소년교향악단과의 멘토-멘티 활동, 세계적 음악가들과의 만남 등 활발한 지역사회교류
지역연계 예술 봉사 활동 · (충남아산중)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의 지적 장애합창단(아장이장합창단)에 일대일 멘토링 · (경북대구교대안동부설초)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1회 정기 봉사공연 실시 · (충남음봉중) 인근초등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악기 교실 운영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이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등 그 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 향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1. 2016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 사업 개요 1부.
2. 2016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 우수 운영 사례 1부.
3. 2016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활성화 학교 운영 우수 사례 1부.

붙임 1

2016 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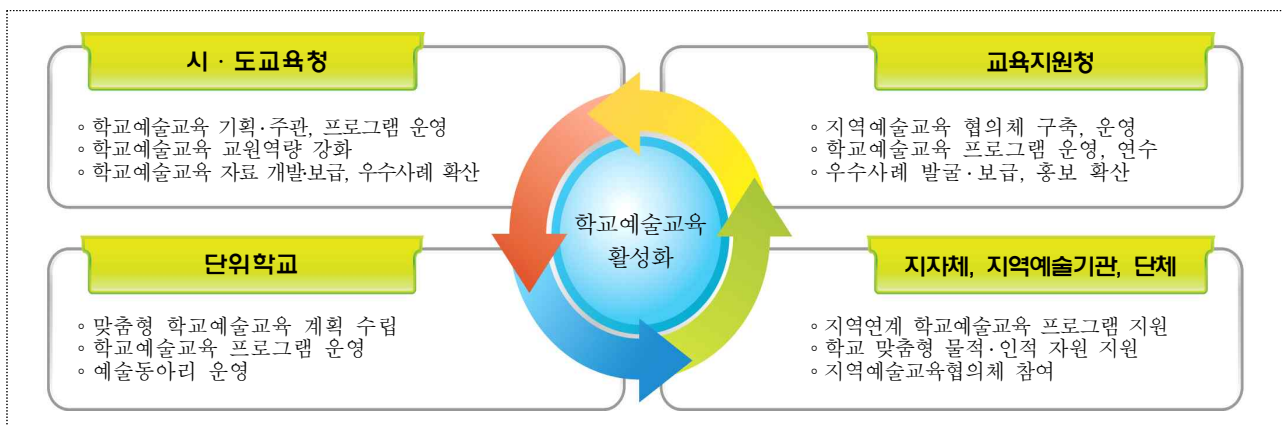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대상) 2016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100개)

※ ('14)17개 → ('15)50개 → ('16) 100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교육지원청 수	8	5	4	5	2	2	2	1	13	8	6	8	7	9	9	9	2	100

- (방향)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예술교육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추진 과제) 지역사회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 단위 학교 예술 교육 운영 지원 모델 개발 및 운영

- ▶ 학교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파악 및 수요조사
- ▶ 지역예술교육 유관기관 현황 조사 및 지역예술교육자원지도 제작·보급
- ▶ 학교, 지자체, 대학, 문화예술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축·운영
- ▶ 예술유관기관과 학교별 매칭, 1학교1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운영

참고

2016 지역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시범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15년 선정(50개)		'16년 추가 선정(50개)	
	개수	교육지원청명	개수	교육지원청명
서울 (8)	3	강동송파, 강서, 성북	5	동부, 서부, 중부, 강남, 동작관악
부산 (5)	3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2	북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대구 (4)	4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인천 (5)	3	강화, 동부, 서부교육지원청	2	남부, 북부교육지원청
광주 (2)	2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대전 (2)	2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울산 (2)	1	강북교육지원청	1	강남교육지원청
세종 (1)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 (13)	6	가평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7	고양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강원 (8)	3	횡성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5	인제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충북 (6)	3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3	청주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충남 (8)	4	천안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4	아산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전북 (7)	3	김제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임실교육지원청	4	군산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 고창교육지원청
전남 (9)	4	여수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 담양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	5	나주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진도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경북 (9)	3	경주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6	포항교육지원청, 안동교육지원청, 경산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경남 (9)	4	함양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5	거창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제주 (2)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제주시교육지원청
계	100개 교육지원청			

부처합동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발표

-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위기를 넘어 新산업 · 新시장 창출을 위한
① 기술개발, ② 산업화 정책, ③ 중장기 투자방향 포함
-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
미세먼지 대응 신시장(국내 17조원, 해외 30조원) 창출 기여

- 정부는 11.11(금)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 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환경부(장관 조정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이번 전략은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이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데 이어, 8월 10일 9大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17년~’23년)이다.
 -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48인)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안) 초안을 마련하고, 두 번의 공청회(서울 9.7, 대전 11.4)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발표하게 되었다.
- 정부는 동 전략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우선 423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 그간 부처별 · 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던 연구를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초미세먼지(PM_{2.5}) 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유해 성분 분석, 집진 · 저감 기술의 획기적 성능개선 등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 종전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가 정책현안의 보조적인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합리적 근거와 정책이행의 효율적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전 부처 R&D 정보 공유를 통해 성과를 연계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R&D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TF 및 민관 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종전 연구방식과 차이점 》

구분	종전의 연구방식	금번 대응 전략
기본 방향	정책현안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우선)	과학기술·정책 간 연계 강화 (과학적 근거 및 기술적 수단 제공)
연구 방식	부처·영역별 개별 연구 (원인규명, 배출저감, 측정·예보 등 따로따로)	부처·영역간 칸막이 제거 (단일사업단에서 종합적 연구 수행)
R&D 투자	1차 배출 중심 (PM ₁₀ 및 PM _{2.5} 직접배출)	위해성 해소 중심으로 전환 (PM _{2.5} 직접배출 및 2차 생성)
R&D 관리	정부 R&D 관리 부족 (기술정의 및 분류체계, 현황 관리 등)	정부 R&D 관리 강화 (기술정의 및 분류체계 정립, 현황 관리 강화)
민·관 협업	과학기술기반 협업생태계 미비	과학기술기반 협업생태계 구축 (범부처 TF, 민·관 협의회 등)

- 이번 전략은 국가전략 프로젝트 차원의 ①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②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정부 재정의 효과적 투자 및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③ 정부 R&D 중장기 투자방향 등 3대 부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부처 연구개발 협업체계인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성공적 R&D 모델을 창출한다.

□ 국가 R&D 역량을 집중하여 ①발생·유입, ②측정·예보, ③집진·저감, ④보호·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과학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① (발생·유입) 초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원별 기여도 규명 등 기반연구를 강화한다.

- 집중 현장조사와 스모그챔버 실험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생성·변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모수화*(parameterization)한다.

* 미세먼지 예측 모델 개발, 정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한 화학 반응식 도출

▲한·미 공동 특별관측에 준하는 독자적인 항공관측 시스템 구축('19),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백령도, 태화산 등) 학·연·관 공동 활용체계 구축('17), ▲권역별 전략지점 상시 측정('17~), ▲대형 스모그 챔버 구축('20) 및 초미세먼지 생성·변환 메커니즘 정량적 규명('22)

- 미세먼지 해외 유입량과 국내 주요 오염원별 기여도(1차 배출과 2차 생성을 포함)를 정량적으로 규명한다.

▲기존 자료를 활용한 권역별 오염원 기여도 우선 산정('18), ▲‘특별대책’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 배출원 및 저감량 산정('19), ▲대중소사업장, 상업시설 등 오염원별 배출특성 프로파일 구축('22), ▲배출원 정밀추적이 가능한 차세대 오염원 기여도 산정기술 개발('22)

② (측정·예보) 실시간 농도·성분 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정보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정밀예보를 실시한다.

- 실시간 농도·성분 측정기술을 확보하고, 대도시·육상 중심의 기존 관측망을 상공과 해상을 포함하는 실시간 입체관측망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국가·지자체·연구 관측망 연계 및 원격탐사 장비 확충('21), ▲MEMS* 등을 활용한 초소형 초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개발('19~'21), ▲차량, 드론 등을 활용한 이동관측 플랫폼 개발 및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3차원 실시간 입체 관측망 구축('23)

*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초소형 정밀기계 제조기술

- 독자 예보모델 개발, 빅데이터·인공지능 적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기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 고농도 예보 정확도 : 62%^{'15년} ⇒ 75%^{'20년} ** 예보기간 : 2일^{'16년} ⇒ 7일^{'23년}

▲한반도·아시아의 대기화학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 미세먼지 예보모델 개발('20),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불확실성 개선('19), ▲미세먼지 빅데이터 구축('19) 및 인공지능을 적용한 중장기 예보시스템 개발('23),

* CAPSS(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 대기환경정책지원시스템(배출량 DB 시스템)

③ (집진·저감) 종전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고효율 저감기술(집진·탈황·탈질)을 개발하고, 그간 간과되었던 응축성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대·중소사업장 대상 비용효과적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실증 등을 통해 확산을 지원한다.

* 예시 : 화력발전소 적용 시 초미세먼지 배출 3 → 0.5mg/m³, NO_x, SO_x 50 → 5ppm

▲대형사업장 직접배출저감 및 탈황·탈질·응축성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실증('17~'23), ▲중소사업장 대상 1·2차 미세먼지 동시 제거용 초저가 시스템·실증('17~'23)

- 도로, 지하철, 건설현장 등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한다.

▲무동력 집진장치 개발 및 차량 시범운행('20~'23), ▲지하철 및 터널용 저에너지형 저감 시스템 개발('20~'23), ▲건설현장 유형별 저감기술 개발 및 실증('20~'23)

④ (보호·대응)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미세먼지 노출량과 미세먼지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저감 기술을 개발, 확산을 지원한다.

- 주택, 대중교통, 지하공간, 상업시설 등 생활환경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50% 이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가정 내 노출 저감기술 개발(외부유입 차단, 내부 공기 정화, 조리시 배출저감 등)(17~), ▲대중교통·상업시설·지하공간 등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17~), ▲야외 운동자, 근로자 등을 위한 착용형 정화장치 개발(20~)

- 미세먼지의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 확보·제공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과 국민의 능동적 대응을 지원한다.

▲인구집단·생활패턴별 미세먼지 노출량 평가(17~), ▲코호트, in vivo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와 질환과의 연관성 연구(17~), ▲미세먼지 유발질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예방기술 개발(19~)

- 분산·파편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농도, 배출량, 위해성 등)를 ICT 기반으로 통합하여 '개인 맞춤형 미세먼지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정보제공 통합플랫폼 구축(17~), ▲IoT 기반 개인 맞춤형 정보서비스 창출 지원(20~)

2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과학기술에 기반한 민·관 협력(기술개발 및 산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위기를 새로운 기회(신기술·신시장)로 전환한다.

□ 먼저, 공공부문의 R&D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 이를 위해, 정부 실증사업에 기업참여 보장, 공공·민간의 기술수요 정기 조사 및 공개,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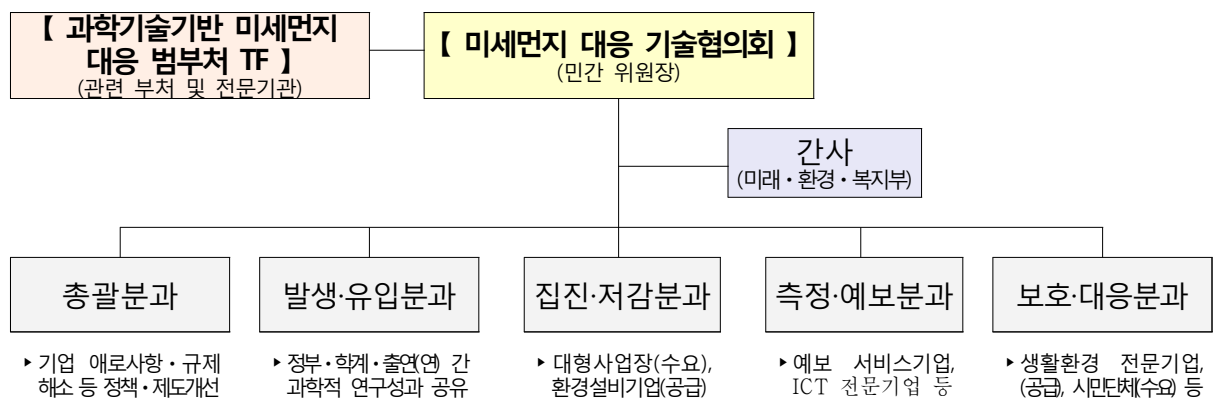
* 미세먼지 유망기술 발굴 및 홍보, 기술설명회 등 추진(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스마트 미세먼지 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술개발 속도와 발맞춰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저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저해 규제*는 개선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기업·연구자·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신기술의 인·검증 절차 간소화(현재 약 6개월 소요), 국민편의를 위한 공기청정기 필터 표준화(현재는 업체·브랜드별로 상이) 등 검토·추진

- 2017년 초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부처간(범부처 TF)·민관간(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 협업 생태계를 구축·운영한다.



- 아울러, 국내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연구협력을 활성화한다.

- 이를 위해, 국내 환경설비기업의 중국 현장실증을 확대*하고 친환경 제품의 중국수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 '16.9월 현재, 3개 사업 327억원 계약 체결, 43개 2,841억원 규모 협상 진행 중

** 환경부 산하 '환경기업 수출종합 지원센터'에서 수출전략 수립 → 마케팅 역량 강화 → 무역실무(FTA 대응) → 전자무역('16.6월 현재 10개사)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 협약을 통해 국내 제품 인증절차 간소화

- 동북아 국가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확대(기존 : 중국 → 확대 : 동북아 주요국)하고 민간 차원의 연구협력*을 지원한다.

* (예시) 「아시아 미세먼지 기술협력 포럼」 구성·운영 : 미래지구(Future Earth),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등 국제 협력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초학제적 연구협력

-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R&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기술관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성과창출을 극대화한다.

- R&D 현황 관리, 투자 전략 수립 및 성과연계 등의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개념 및 기술분류 체계(대분류 3개, 중분류 10개, 세부기술 25개)를 정립하였다.

※ 종전에는 대기환경연구의 국소분야로 간주되어 중요성에 비해 별도의 개념 정의 및 기술분류 체계가 없어 R&D 현황 관리 및 효율적 투자에 한계

<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념 및 관련 현황 >

- ◆ **미세먼지 대응 기술 정의** : 미세먼지(PM₁₀), 초미세먼지(PM_{2.5}) 및 관련 원인물질(SO_x, NO_x, VOC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
- ◆ **정부 R&D 투자 규모** : 420.3억원 ('15년말 기준, 상향식 과제(bottom-up)과제 제외)
- ◆ **미세먼지 대응 기술 수준** :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평균 70.5%, 기술격차 7.5년

- 또한, 새롭게 마련된 기술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분야(10개 중분류)별 정부 R&D 투자, 국내외 논문·특허, 기술수준 조사 결과, 시장 및 산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투자 방향*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 : 민관 역할분담, 중점투자 분야, 산업화 지원 방안 등

< 분야별 투자 방향(안) >

대분류	중분류	중점 투자분야(예시)
현상규명 및 예측	원인규명	• 분산된 연구역량 결집
	현상진단 및 측정·조사	• 실시간 성분·농도 측정 원천기술 개발
	대기질 모델링	• 예보 정확도 제고 등 정책현안 해결
미세먼지 배출저감	고정오염원	• 초미세먼지 고효율 저감기술 확보
	도로 이동오염원 (자동차, 이륜차 등)	•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핵심소재·부품 국산화
	비도로 이동오염원 (선박, 항공, 철도 등)	• 소형(연안)선박 배출현황 조사 및 저감기술 개발
	비산먼지	• 도로비산먼지 저감수단 확보(현재는 살수차 수준)
국민생활 보호	건강영향평가	• 미세먼지 노출·독성·위해성 평가 장기 지원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	• 신소재 필터 및 핵심부품(고감도 센서 등) 개발
	정책 및 정보 서비스	• 미세먼지 정보 공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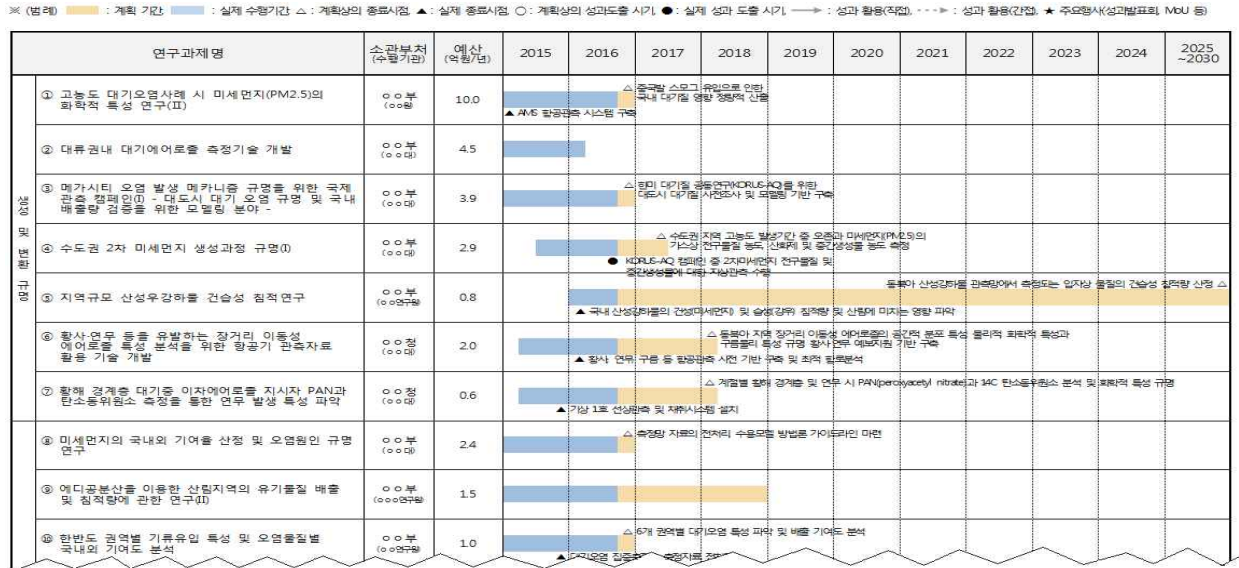
※ 분야별 투자전략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미세먼지 대응 기술 투자 뿐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R&D 활동 정보를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으로 집대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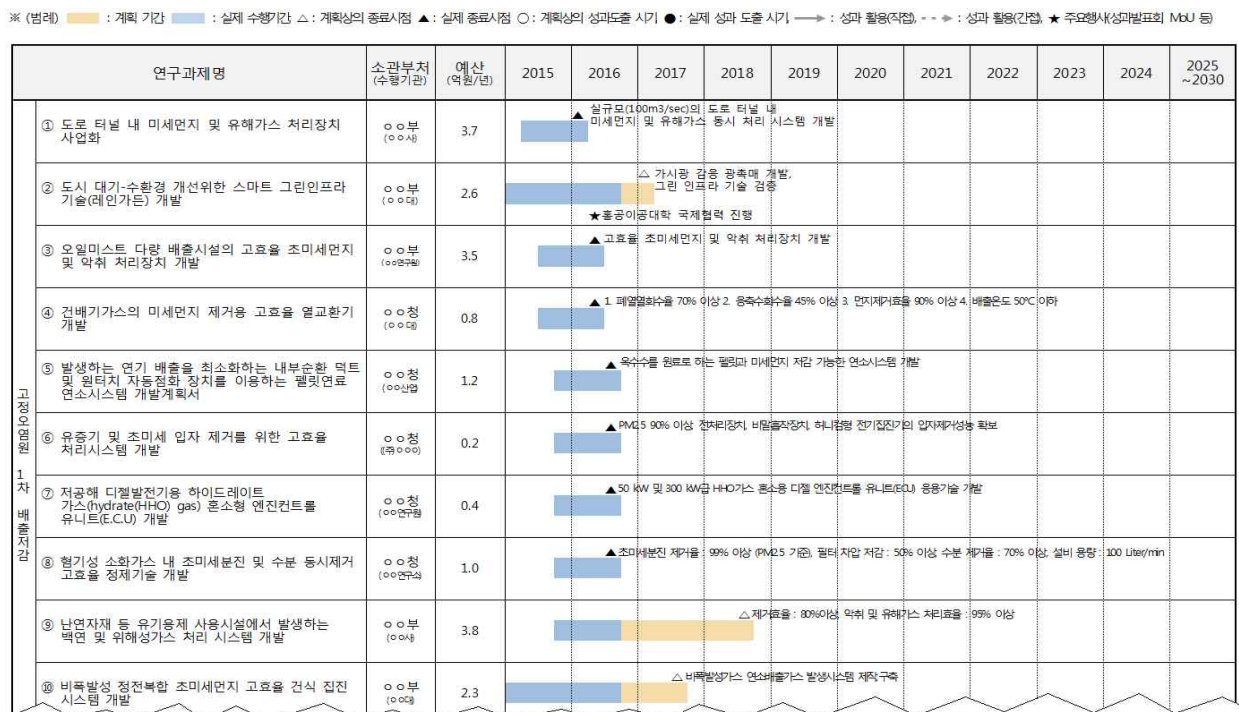
* Particulate-matter Technology Roadmap

** 미세먼지 대응 기술 R&D 관련 모든 주체(부처·재정당국, 연구관리기관, 연구기관 등)가 R&D 기획·관리·수행, 성과연계, 홍보 등에 활용 가능

<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 예시 1 : 원인규명 연구 분야 >



<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 예시 2 :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



- 정부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국내외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14년 】	【 '23년 】
기술개발	초미세먼지 농도(서울)	25 μ g/m ³	20 μ g/m ³
	예보정확도(고농도) 및 기간	62%(‘15), 2일	75% 이상, 7일
	초미세먼지 배출량*	약 170만톤	85만톤
신시장 창출**	국내 시장	6.2조원	17조원
	해외 수출	3.3조원	30조원
일자리 창출**		3.7만명	10만명

*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목표 : 사업장 PM, NOx, SOx, VOCs 총 배출량 기준

** 시장 · 일자리 : ‘대기환경산업’ 기준(약 70% 이상이 미세먼지 대응 분야)

- 한편, 동 전략의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홍남기 제1차관은,
-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정책 · 제도개선, R&D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 도출된 만큼, 환경부 ·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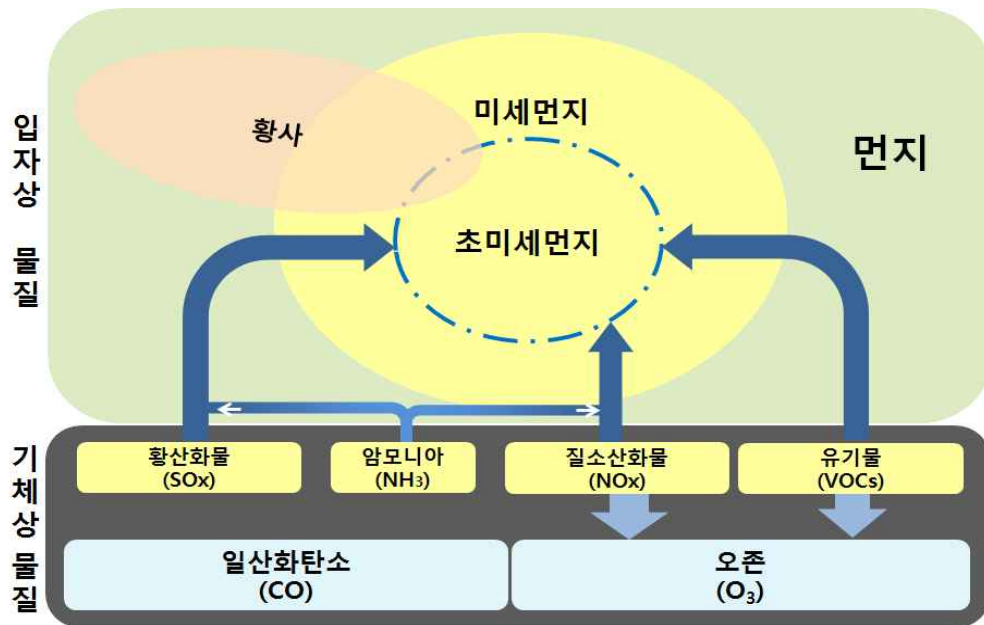
<끝>

비전	과학기술로 깨끗한 대기환경 실현과 신산업 창출을 동시 지원		
핵심 목표	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효과적 근본적·과학적 수단 확보 ② 미세먼지 대응 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③ 정부 R&D의 효율성 제고 및 전략적 투자 강화		
패러 다임 전환	① 관리 용이성(PM ₁₀ , 1차 배출) 중심 ⇨ 위해성(PM _{2.5} , 2차 생성) 중심 ② 환경 vs 산업 ⇨ 환경+산업(미세먼지 대응 신산업 육성) ③ 미세먼지 대응 R&D 관리체계 미비 ⇨ 철저한 기술관리		
추진 단계	현안대응('17~'19) 현안해결에 시급한 정보 및 수단 확보 (초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등)	적용·실증('20~'21)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현장 적용·실증 (초정밀 센서, 사업장 배출저감 기술 등)	성장·도약('22~'23) 기술 확산 및 산업화, 글로벌 진출 성과 창출 (기술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국내 시장 규모, 해외 수출 확대 등)

부문(3)	핵심 과제(11)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1. 미세먼지의 발생·유입 규명 2. 신속·정확한 측정·예보 기술 확보 3. 비용효율적 집진·저감 시스템 개발 4. 국민보호·대응 기술 개발
기술 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미세먼지 대응 기술혁신 촉진 2. 미세먼지 대응 협업 생태계 구축 3. 국내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 지원 4. 미세먼지 국제연구협력 주도
정부 R&D 중장기 투자 방향 설정	1.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념 및 분류체계 마련 2. 부문별 투자방향 설정 3. 미세먼지 대응 기술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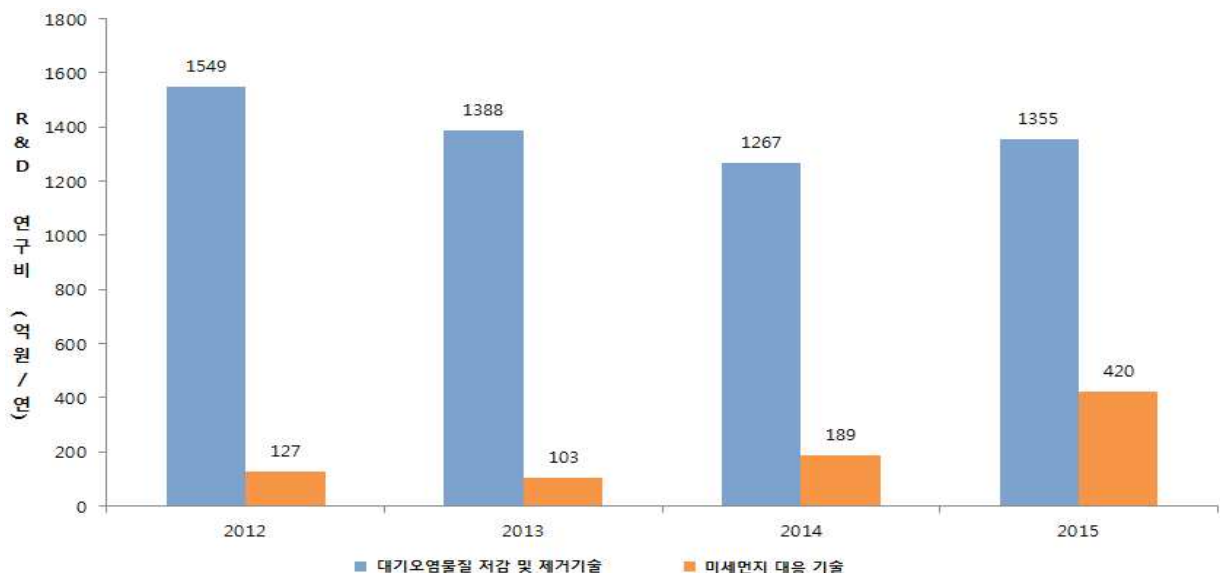
- (연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총 61종) 중 주요 대기오염물질 기준,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노란색)

※ 입자상 물질(미세먼지) 및 기체상 물질(초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물질) 포함



- (투자 비중) 대기오염물질 관련 R&D 투자*는 정체 중인 반면,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KISTEP)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기준



대분류(3)	중분류(10)	세부기술(25)	기술 내용
현상규명 및 예측	원인규명 연구	생성 및 변환 규명	인위적 및 자연적 생성, 변환, 소멸 규명
		오염원 규명	미세먼지 오염원 규명 및 기여도 추정
	현상진단 및 측정·조사	배출원 조사	배출량 산정 및 배출특성, 배출계수 연구
		측정·분석 기술	측정자료 정확도/정밀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 기술 개발
		상시 및 집중측정	실시간, 3차원, 집중 측정 등을 통한 감시 및 현상 진단
	대기질 모델링	미세먼지 예측·예보·진단 모델링	미세먼지 예보모델 정확도 향상 및 모델을 이용한 현상 규명 연구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미세먼지에 의한 기후영향평가 모델링
미세먼지 배출저감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사업장(대형, 중소형 및 직화구이, 숯가마 등)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 ₃ 등) 저감
	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차량 1차 배출 저감	차량 1차 배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차량 2차 생성 저감	차량 배출 전구물질(SOx, NOx, VOCs, NH ₃ 등) 저감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	선박배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
		기타 비도로용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	건설·농기계, 항공 등 기타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기술
	비산먼지 저감	도로 비산먼지 저감	도로 (지하철도, 터널 등 특수 도로 포함) 발생 비산먼지 저감
		비도로 비산먼지 저감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
국민생활 보호	건강영향 평가	독성 평가	미세먼지와 그 화학성분의 독성평가 기술
		인체노출 평가	미세먼지의 군집별 노출 정도 평가 기술
		인체위해성 역학	코호트 구축, 장기노출 추적조사 등 미세먼지에 의한 위해성 평가 기술
	미세먼지 노출저감 기술	실내 미세먼지 탐지	실내공기 미세먼지 중 유해성분 탐지 기술
		실내 공기 정화	청정공조, 청정환기, 청정주방배기 등 실내공기정화 기술
		실내 공기질 관리	주택,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관리 기술
		개인착용형 노출저감 기구	마스크, 개인휴대용 탐지 기구 등
	정책 및 정보 서비스	미세먼지 정보관리 및 서비스	미세먼지 농도, 위해성, 오염지도 등 통합정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과학기술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R&D 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
		기술의 글로벌화	R&D 성과 수출 산업화 및 국제 대기환경 협력공동체 구축/운영
↑ ↑ ↑ ↑ ↑ ↑ ↑ ↑			
미세먼지 대응 유관 R&D		일반 대기환경, 기상예보, 환경위성연구 등 (‘15년 기준 약 381.3억원)	

가을여행주간, 전국 주요 관광지 관람객 증가

- 55개 관광지 관람객 9.5%, 제주도 입도객 11.9% 증가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0월 24일(월)부터 2주간 추진되었던 가을 여행주간 기간 동안, 국내 주요 관광지에 관람객이 증가하고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확대되는 등 국내여행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10월 24일(월)부터 11월 5일(토)까지 관광지 대표소를 통해 수기로 조사된 관람객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 이는 요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한 수치에 따른 것이다.

우선 한국관광100선, 여행주간 집중 홍보지, 특별 개방지, 여행주간 프로그램 진행지 등 주요 관광지점 55곳에 대해 지난 10월 24일(월)부터 2주간의 관람객 현황을 조사한 결과, 55곳의 방문객 총계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다만 지진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거제, 통영 등은 전년 대비 관람객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구 분	증가율	'15 (10. 26.-11. 5.)	'16 (10. 24.-11. 3.)
55개 주요 관광지 방문객	9.5% ↑	2,482,139명	2,717,004명
부산 감천문화마을	37.8% ↑	32,517명	44,808명
대구 근대골목(근대문화체험관)	40.9% ↑	6,553명	9,231명
대구 김광석다시그리기 길	9.9% ↑	23,035명	25,304명
강원 오죽헌	45.5% ↑	19,172명	27,902명
강원 대관령 양떼목장	3.8% ↑	17,408명	18,076명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15.6% ↑	17,737명	20,511명
단양 도담삼봉	14.9% ↑	158,502명	182,115명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90.7% ↑	22,130명	42,203명
전주 경기전(한옥마을)	20% ↑	33,017명	39,608명
무주 태권도원	148.2% ↑	1,446명	3,589명
순천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25.4% ↑	281,093명	352,494명
경주 동궁과 월지	-54.4% ↓	61,755명	28,190명
경주 양동마을	-33.6% ↓	10,163명	6,747명
거제 바람의 언덕	-24.9% ↓	25,489명	19,146명

거제 해금강	-18% ↓	24,623명	20,188명
통영 동피랑 마을	-19.2% ↓	62,057명	50,169명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10.8% ↓	72,304명	98,707명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4.6% 증가, 주요 관광지 주변 통행량도 증가

가을 여행주간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여행주간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으며, 관광지 주변 주요 톨게이트의 경우에도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행주간 국내여행 총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증가율	'15(10.26-11.7)	'16(10.24-11.5)
고속도로 통행량	4.6% ↑	5,508.7만대	5,763.7만대
주요 톨게이트(관광지주변)	15% ↑	409,707대	471,116대
- 진부 톨게이트(오대산)	8.7% ↑	42,734대	46,434대
- 단양 톨게이트(소백산)	15.9% ↑	23,826대	27,608대
- 남제천 톨게이트(강원남부)	23.1% ↑	61,135대	75,241대
- 동홍천 톨게이트(강원북부)	20.7% ↑	113,990대	137,561대
- 지리산 톨게이트	42.7% ↑	18,400대	26,250대
- 속리산 톨게이트	17.3% ↑	20,914대	24,528대

전국 국립공원 입장객 13%

전국 14개 국립공원 대표소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가을 단풍 시즌을 맞이해, 국립공원 방문객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수치는 해당 국립공원의 특정 대표소 방문객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전체 국립공원으로 파악했을 경우, 방문객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 입도객 역시 전년 대비 외국인 31%, 내국인 7.5%, 총 11.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증가율	'15 (10.26-11.5)	'16 (10.24-11.3)
14개 국립공원 입장객	13% ↑	846,490명	960,653명
무등산 국립공원	1.9% ↑	111,714	113,857
설악산 국립공원	82.9% ↑	136,592	249,769
치악산 국립공원	25.2% ↑	29,544	37,001
오대산 국립공원	37.9% ↑	60,308	83,144
월악산 국립공원	-39.0% ↓	17,726	10,807
속리산 국립공원	18.7% ↑	51,796	61,506
지리산 국립공원	-27.1% ↓	45,150	32,906
내장산 국립공원	-8.2% ↓	111,779	102,581
덕유산국립공원	30.2% ↑	12,900	16,800
변산반도 국립공원	-2.9% ↓	42,413	41,163
월출산 국립공원	-20.1% ↓	15,846	12,660
소백산 국립공원	1.1% ↑	63,186	63,903
주왕산 국립공원	-2.5% ↓	96,297	93,882
한라산 국립공원	-20.6% ↓	51,239	40,674

(단위:명)	2015년(10. 26.~11. 7.)			2016년(10. 24.~11. 5.)		
제주도	내국인	외국인	총계	내국인	외국인	총계
입도객	430,320	98,974	592,294	462,512	129,529	529,041
증감율				7.48%	30.87%	11.85%

여행주간 특별 개방지 대다수 증가로, 국내여행 견인 역할

여행주간 특별 개방지의 경우, 관람객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행주간 동안 총 26개 지역 41곳의 특별 개방이 추진되었는데 영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관람객이 증가했다.

구 분 (단위 : 명)	증가율	'15 (10.26-11.5)	'16 (10.26-11.5)
남산골한옥마을(특별개방지)	-12.6% ↓	33,331	29,125
누리마루 APEC하우스 (특별개방지)	6.6% ↑	43,824	46,714
국립대구과학관	-3.6% ↓	12,068	11,637
국립광주과학관	48.0% ↑	4,947	7,321
홍유릉 (특별개방지)	104.7% ↑	2,113	4,325
태권도원	148.2% ↑	1,446	3,589
나로우주과학관 (특별개방지)	35.6% ↑	3,141	4,258
태안사 (특별개방지)	16.5% ↑	382	445
영천보현산천문과학관 (특별개방지, 야간)	-41.6% ↓	586	342

주요 유원시설 방문객 14.5% 증가, 여행상품 판매 실적 12.6% 증가

그 외 주요 유원시설(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대구이월드, 경주월드)의 방문객은 전년 대비 14.5% 증가했으며, 여행상품 판매 통계에서도 이용 인원 12.6% 증가, 판매 매출액 5.5%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분류		측정(명)	기간		증감(%)
			15. 10. 26.-11. 6.	16. 10. 24.-11. 4.	
유 원 시 설	에버랜드	방문객	282,654	290,111	2.64%
	롯데월드	방문객	214,738	258,643	20.45%
	서울랜드	방문객	95,330	134,100	40.67%
	이월드	방문객	28,665	43,953	53.33%
	경주월드	방문객	20,447	8,177	-60.01%
	계		641,834	734,984	14.51%

구 분	증가율	'15	'16
여행상품 이용인원	12.6% ↑	(10. 24.-11. 6.) 225,659명	(10. 24.-11. 6.) 254,078명
여행상품 판매 매출액	5.5% ↑	(10. 24.-11. 6.) 15,873천 원	(10. 24.-11. 6.) 16,745천 원

* 여행상품은 여행업협회 등록 주요 국내여행상품 판매업체 19개를 대상으로 조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을 여행주간을 통해 국민들이 국내여행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가을 여행주간이 국내의 우수한 여행지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내여행 참여 현황과 소비 지출액 등 온라인 설문조사와 거대자료(빅데이터)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여행주간의 더욱 자세한 결과는 1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대표 수리취떡, 6차산업화를 통해 향토음식 가치 확산!”

- 11월, 이달의 6차산업 인(人), 정선수리취떡영농조합법인 전연택 대표 -

《이달의 6차산업인 주요내용》

- ◇ (선정결과) 강원 정선 “정선수리취떡영농조합법인 전연택 대표”
 - (6차산업 내용)
 - (1차) 고품질 수리취 생산 및 수매
 - (2차) 수리취떡 가공(취떡제조 표준매뉴얼 개발, 수리취떡, 수리취 영양밥, 수리취 약밥, 수리취 송편 등)
 - (3차)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체험교육), 공동브랜드 ‘산마을 잔치’ 운영
 - (혁신성) 지역의 향토음식(수리취떡)을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고용창출, 생산농가 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동브랜드화를 통한 상품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확산
- ◇ 전연택 대표의 6차산업 성공전략
 - 하나, 규격화된 취떡제조 표준매뉴얼 개발로 상품의 고품질 유지
 - 둘,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제품 홍보
 - 셋, 참여주체(1·2·3차)간의 융화를 위한 정기적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우수 경영체 발굴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월 “이달의 6차산업인(人)”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11월의 6차산업인으로 강원 정선 소재의 정선수리취떡
영농조합법인 전연택 대표(51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정선수리취떡영농조합법인은 재배농가의 생산지도 교육을 통한
고품질 수리취 생산 및 수매, 수리취떡 가공(취떡제조 매뉴얼
개발), 지역축제 및 행사에 수리취떡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법인 공동브랜드 '산마을 잔치' 개발·운영 등 지역의 향토음식
(수리취떡)을 활용해 성공한 대표적인 6차산업 우수사례로 각광
받고 있다.

* [6차산업 추진 내용] 고품질 수리취 생산 및 수매 + 수리취떡 가공(수리취 떡,
수리취 영양밥, 수리취 약밥, 냉동 수리취 송편 등) + 수리취떡 만들기 체험, 각종
박람회 시식평가, 지역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 매체(TV, 신문, 지하철광고 등) 홍보

** [주요 성과] (매출액) '13년 : 1,500백만원 → '14년 1,700백만원 → '15년 2,100백만원
(일자리) '13년 : 7명 → '14년 15명 → '15년 15명
(방문객) '13년 : 50명 → '14년 100명 → '15년 1,000명

- 전 대표는 조합원들과 '수리취'를 지역을 대표하는 고랭지 대체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선수리취떡명품화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듬해 해당사업이 농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향토산업육성사업 : 농특산물,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특색있는
유·무형의 농어촌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
분야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

- 당시 수리취 재배농가의 수익은 1차 생산물 판매수입이 주를
이뤘으며, 취떡은 단오 때 만들어 먹던 한시적 가공식품이었다.
- 특히나 취떡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리취는 잔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과 찌서 익히는 증숙 작업의 반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워 개별 떡집에서는 취떡 수요가 많지 않은 비수기에는 생산을 포기하는 물량이 많았다.

○ 이렇게 만들기 번거로운 원료를 ‘가공 공장을 통해 원하는 양과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산나물 전문가인 전 대표는 조합원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계약재배, 자동세척설비 도입, 개별 경영체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토의를 거쳐 정선수리취명품화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 또한 1차(수리취 생산), 2차(취떡 가공), 3차(떡집 운영)산업의 융복합이 이뤄져야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참여 주체별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전 대표는 정선 수리취떡의 명품화를 위해, 2014년 각 조합원별 가업으로 이어오며 축적한 수리취떡 제조의 원천기술과 기업의 상품화 능력을 결합하여 취떡제조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산마을 잔치’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서 정선 수리취떡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 정선수리취떡영농조합법인은 취떡제조 표준매뉴얼에 맞는 대량 생산 체계(200평 규모)를 갖추고 HACCP인증을 획득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리취 계약재배 면적 확대,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90톤 이상의 찹쌀, 멍쌀 매입으로 매년 8~10억 원 이상의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 정선수리취떡영농조합법인은 고품질 수리취를 생산 및 수매하고 있으며, 수리취떡 가공,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향토음식(수리취떡)의 명품화를 이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1차산업) 생산지도 교육을 통한 고품질 수리취 생산 및 계약 재배, 지역농협을 통한 찹쌀, 멥쌀 매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2차산업) 200평 규모의 가공공장(HACCP인증)에서 규격화된 표준매뉴얼을 통해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선 수리취떡, 수리취 영양밥, 수리취 약밥, 냉동 수리취 송편 등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 (3차산업) 공동브랜드 ‘산마을 잔치’ 개발, 떡 만들기 체험장 운영, 매년 10회 이상의 찾아가는 체험행사(수리취떡 만들기, 시식평가 등) 운영, 각종 매체(TV, 신문, 지하철광고 등)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김 철 과장은 “정선수리취떡영농조합법인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6차산업 사례를 발굴해 6차산업이 농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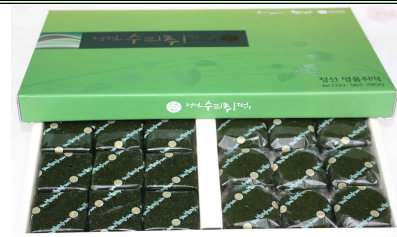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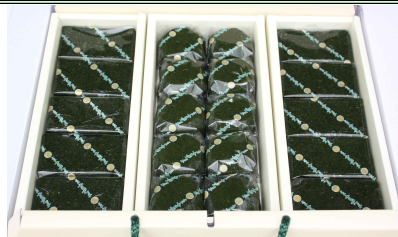
정선수리취떡 영농조합법인 현황

□ 일반현황

- 업체명 : 정선수리취떡 영농조합법인 * 법인설립 : 2011.06.02
- 대표자 : 전연택 (033-562-9701, 010-5373-5245)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11(약초상가 18)
- 인증보유 : 「산마을 잔치」 상표 특허등록, 포장재 디자인 등록

□ 추진사업

- (1차) 수리취 생산 및 수매 (2차) 수리취떡 가공 (3차) 각종 축제 및 수리취떡만들기 체험프로그램운영

제품 1	제품 2	제품 3
		
정선수리취떡 1호 (600g)	정선수리취떡 2호 (2kg)	정선수리취떡 3호 (3kg)

공장	가공공장	체험장
		
수리취 가공공장	수리취떡 제조공장	만들기 체험장

□ 주요성과

구 분	2013	2014	2015	비 고
매출액	15억	17억	21억	
인력창출	7명	15명	15명	
체험 방문객	50명	100명	1,000명	
계약재배 및 지역수매	40톤	80톤	90톤	

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 '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 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물산업 육성전략',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확정
-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One-Stop 지원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 정부는 '16.11.14(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교육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세계 물시장 : 7천억불 규모(800조원, '16), 연평균 2.98% 증가 전망('13~'20)

** 물기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불과

□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목표('15 → '30) : 매출액(31.4 → 50조원) / 수출액 비중(4.1% → 20%) / 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개발 - 제품 사업화 - 해외 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대구 산업단지내 조성('16.11.10 착공식, '18 완공) : 산학연(기업·연구기관·학교 등) 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6~)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국내외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해 나간다.

* (국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해외) 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 예시 : 담수화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원 수주

-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新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들여 ICT를 융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연안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개발한다.

*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17~),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 예시 :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물산업 클러스터내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협력대학원·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 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금년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1~)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16.11.21~'17.2.28)한다.

-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돌봄·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 긴급복지 : 긴급 생계비(4인가구 월 113만원), 연료비(월 93천원) 지원 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8.4천명)를 통한 일일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 (아동)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제공 등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

* ('15 실적) 50만 가구, 452억원 지원 → ('16 계획) 73만 가구, 680억원 지원 예정

** (대상) 노인·장애인·영유아 포함 빈곤가구 → 임신부 추가 / (기간) '15.12~'16.3 → '16.12~'17.4

- 국민 누구나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 중점 발굴 · 지원대상

- 위기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긴급복지지원(생계비·연료비·전기요금 등)
-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 수급자 선정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등)
-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질병·노령·장애 등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 요금감면 서비스(도시가스·전기·TV수신료 등) 대상 가구 : 감면신청 적극 안내·지원

- 또한, 이른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 (기존) 12.1~익년 3.15 → (개선) 11.15~익년 3.15

- 폭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어업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제설 등 관리·지도를 강화한다.

* 노후 시설(1,658개소) 안전점검, 눈사태 우려지역·해안가 통제기준 마련 등

-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가동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연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 △제설취약구간(램프·교차로 등 2,431개소) 특별관리 △제설물자 사전 확보 (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 △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마을, 76,361명) 등

- 특히, 금년부터는 군·업계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설차·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 제설장비 39천대(전년 대비 116% 증가)/ 제설자재 예산 2,372억원(18% 증가)

- 지난 1월 대설·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 고립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항·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사항도 최소화한다.

* '16.1.23~1.25일 폭설로 제주공항 체류객 8만명 발생, 울릉도 배편통제

-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등 국민 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간다.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등

1. 추진체계

비 전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목 표		(‘15년)		(‘30년)
	물기업 매출액	31.4조 원	⇒	50조 원
	물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4.1%	⇒	20%
전 략	① 물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② 물 新시장 창출	③ 물산업 혁신 기반 조성	

2. 육성전략

- ①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원스톱 지원 체계 (Bridge Program)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시장지향형 R&D 추진 및 맞춤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검증
 -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및 수요 창출
 - 현지맞춤형 지원 및 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촉진
- ②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해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정립하여 재이용률 제고(‘15년 6.4% → ‘30년 34%)
 - 노후 상·하수도를 ICT가 융합된 스마트인프라로 혁신(‘17~‘30년, 9.4조원)
 - 연안·도서 지역의 해수담수화 확대, 물-에너지 최적연계 모델 개발
- ③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등 물산업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마련

3. 기대효과

- (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경제) 수출액 확대, (고용) 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7만개) 창출, 청년층 선호 유망직종 창출

【참고】 : 물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1. 동절기('16.11.21 ~ '17.2.28)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23종) 활용,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대상 발굴

2.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

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동절기 생계지원 및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기준중위소득 1.7% 인상, 4인가구 439만원→447만원)
- 노인 일자리 확대('16년 40천개 → '17년 43천개)
- 공공요금 감면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
- 난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급자 대상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나. 노인·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보호

- 독거노인(22만명)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난방용품 등 지원
-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8시간 이상) 등 저소득층 아동 돌봄 강화
- 경로당(65천개소) 난방비 지원(월 30만원), 노숙인 지원 강화

다. 동절기 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이상 무료)
- 폭설·혹한 등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3. 국민 눈높이 홍보 및 나눔문화 조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가이드북 발간 등 복지제도 알리기
-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를 위한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실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3,588억 모금 목표로 실시 ('16.11.21 ~ '17.1.31)

자연재난 종합대책

1. [상황관리]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강화

- 이상 기상현상 고려 한발 빠른 겨울철 대책기간(11.15 ~ 익년 3.15) 운영
-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2. [인명·시설보호]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특별관리

- 붕괴우려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마련 및 수시점검

* 노후건축물·주거용비닐하우스·시장비가림 등(1,658개), PEB·아치판넬(2,546개), 농·축·수산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수산증양식장 등 342,410개) 지정 관리

** 393개소 (눈사태 우려지역 34,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359)

- 제주도·울릉도 등 도서·산간지역 구호물자 비축기준 상향 운영

3. [교통대책]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

- 제설취약구간(2,431개소), 제설자재·장비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등 특별관리
- 제설자재(776천톤), 제설장비(39,638대) 사전 구입 확보
-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및 체류객 불편 최소화, 대중교통 증편 연장

4. [피해복구] 피해발생시 제설장비·인력 상호 응원체제 가동

- 민·관·군 제설장비·인력 협약체결*, 응원체제 운영

* 軍 283개 부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민간단체 312개 기관 협약체결

- 민간단체 등과 제설인력(304만명) 긴급동원 협조체제 구축

5. [한파대책] 취약계층 특별관리 및 피해 최소화

- 노숙인(11,901명) 종합지원센터·보호시설(147개소) 등 취약계층 특별관리
- 한랭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연계,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6. [홍보대책] 국민참여 홍보 강화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유연근무와 휴가제도, 우리 회사도 이제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부,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안내서 발간 -

< 유연근무·휴가제도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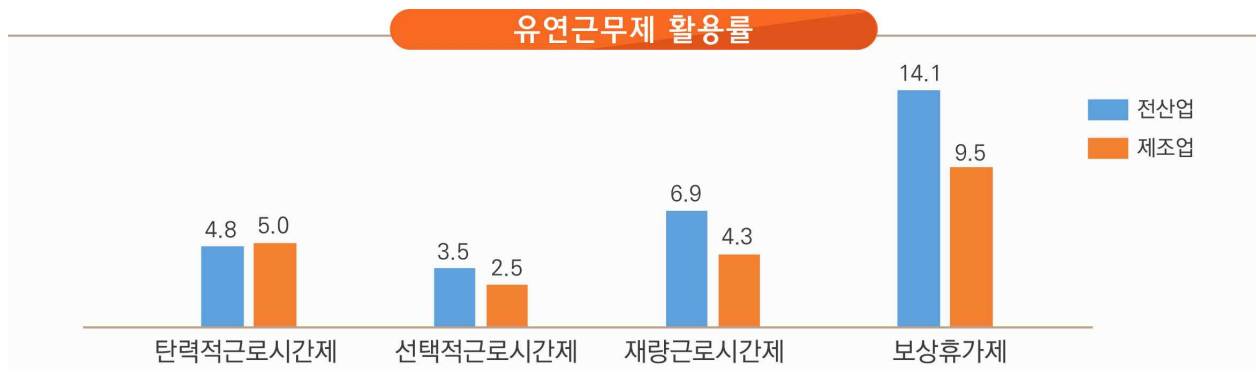
숨피 (전동 차양 시스템 제조, 근로자 24명) 	◇ 근로자수가 적은 제조기업도 다양한 유연근무와 휴가제도 운영 - (도입과정)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3단계에 걸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거부감 해소 - (제도운영)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시차근무제 도입, 장기근속자 대상 한 달의 유급휴가 부여, 업무집중 시간 설정 및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 지원 시스템 구축 - (효과) 높은 휴가 사용률('13년 94.9%, '14년 99.9%),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향상
롯데홈쇼핑 (서비스업) 	◇ 책상에 '얼리버드'와 '슬로우스타터' 스티커를 붙여 시차근무제 이용 근로자 표시,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도입과정) 조직문화혁신팀 신설로 인사제도 도입 추진, 2개월간 시범운영 및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단계적인 도입 - (제도운영) 수·금요일을 '가족사랑데이'로 정하여 퇴근 독려, 퇴근시간 자율 점검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이 직접 퇴근시간 관리, 휴가 우수부서에 포상, 연속휴가 사용시 쇼핑물 적립금 지급, 연차 이유 묻지 않기 캠페인 등 진행 - (효과) 업무효율 증대 및 직원들의 만족도 상승
남양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분위기였으나, CEO와 젊은 직원들의 관심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 - (도입과정)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제도 개편, 모바일 업무포털과 전자결재 시스템 등 지원 시스템 구축, 임원과 직원들이 팀을 이뤄 현장문제를 공유하는 등 노사간 적극적인 의사소통 - (제도운영) 탄력적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장기근속자(25년이상) 대상 부부동반 동남아여행 지원 등 다양한 휴가제도 운영 - (효과) 이직률이 '13년 6.1% → '15년 3.0%로 꾸준히 감소

□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안내서를 11.11일 발간하였다.

- 현재 해외의 기업*들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경직적인 근무형태에 얽매어 있으며, 유연근무제와 연차휴가 활용률(60.4%)도 낮은 편이다.

* 일본의 도요타는 2만5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 나오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일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16.8월)



* 자료: 고용노동부 조사('13)

- 이에, 고용부는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보다 쉽게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마음껏 휴가를 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게 되었다.
- 유연근무 안내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되며, 1권에서는 유연근무·휴가 제도 도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2권에서는 유연·원격근무에 대한 도입방법을 설명한다.
- 한편, 1권 사례집은 유연근무와 휴가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절차와 실제 운영 중인 9개 기업의 사례를 업종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현장의 기업들은 유사 업종의 운영사례를 직접 참고하여 유연근무와 휴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근로 관행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권 안내서는 유연근무 도입 단계별로(①진단 → ②제도 설계

→ ③실행 → ④사후관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11.16일 발간할 예정이다.

- 이지만 교수(연세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고용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구조의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 “고용부에서 발간한 안내서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지역의 기업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일가양득 컨퍼런스(11.16)에서도 안내서 1, 2권을 배포하여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안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과 감독 등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연차휴가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건강,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수능 전후 청소년 상담 및 보호활동 집중 전개

- ‘청소년상담 1388’ 24시간 학업진로 상담 -

■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계도·점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수능 부담감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많아 요. 하지만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 홀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삶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민해결을 위해 청소년상담 1388 같은 통로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청소년상담사 이예슬 씨)

-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수험생들이 수능 후 스트레스 해소 차원이나 갑작스런 해방감에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전후(11.15.~11.22.) 8일 간 전국 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활동을 벌인다.
 - 이번 활동은 정부3.0 협업 가치 아래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총 790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 수능일 이전에는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중심으로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수능 당일부터는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시·군·구와 지역 경찰 합동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을 원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할 통과 의례지만,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라며,
 - “수능 전후로 학업이나 진로문제로 고민스럽다면 혼자만 짚어지지 말고 청소년상담 1388과 같은 상담창구를 꼭 활용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먼저 계도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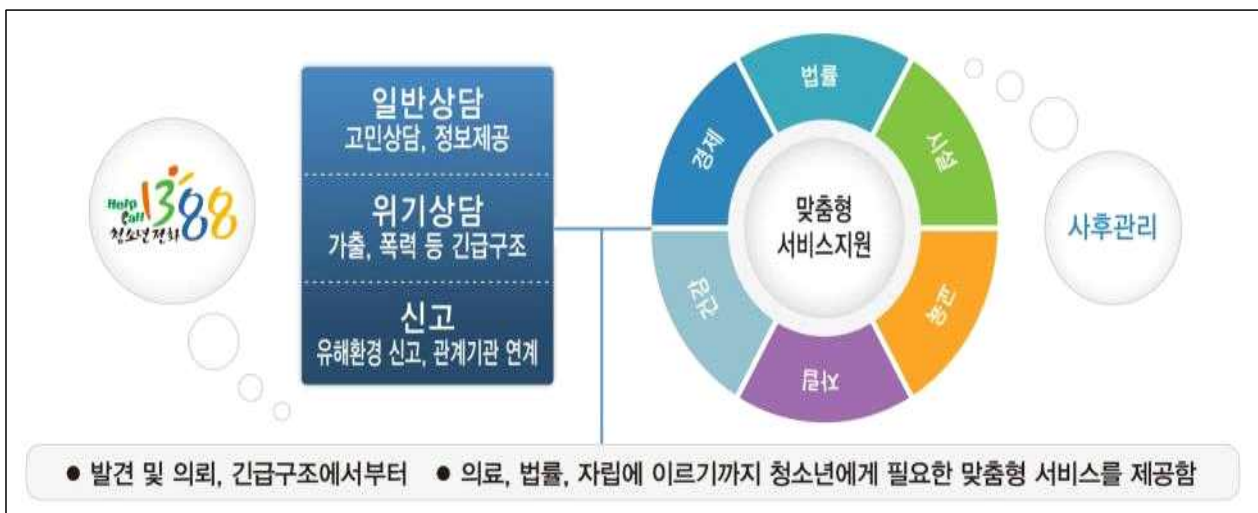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청소년유해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청소년전화<1388>, 문자상담<#1388>, 사이버상담 추진현황
2. 수능전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개요

□ 추진개요

- (목적)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 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추진경과)
 - 가출 신고전화, 긴급전화 등을 청소년전화 1388 통합(' 05)
 -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서비스 운영(' 07)
 -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을 위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개소(' 11)
 -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카카오톡 상담채널 운영(' 14.7월)
- (추진체계)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8
 - 문자·카카오톡 상담 : #1388
 - 사이버상담 : 채팅·게시판 상담 및 웹 심리검사(www.cyber1388.kr)

< 청소년전화 1388 서비스 운영체계 >



□ 주요내용

○ 1388 청소년 상담 채널 유형별 통계(1388 전화, #1388 문자, 사이버 상담)

(2016년 9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합계	가족	일 탈 비행	학업 진로	성	성 격	대 인 관계	정 신 건강	생 활 습관	인 터 넷 사용	정 보 제공	법 률 정보	활 동	기 타
'13년		728,881	45,618	37,308	81,103	29,451	19,000	105,575	49,615	11,513	17,624	251,747	1,969	6,463	71,895
'14년		751,281	59,072	37,885	93,708	30,060	21,691	135,286	60,135	12,742	19,788	188,712	10,521	6,549	75,132
'15년		772,497	109,623	32,777	89,934	31,802	27,064	140,437	77,126	18,161	24,259	135,926	7,852	11,351	66,185
'16 년 9월 현 재	합 계	608,729	96,884	27,618	70,769	21,931	21,114	103,525	65,440	11,675	11,735	105,864	4,860	6,360	60,954
	청 소 년 전 화 13 88	295,583	20,838	18,513	27,516	8,894	11,302	30,840	26,116	2,155	9,520	94,241	729	2,874	42,045
	문 자 상 담 (#13 88)	180,697	62,605	7,643	22,466	5,562	3,345	34,117	16,991	4,597	1,311	5,364	3,958	3,354	9,384
	사 이 버 상 담	132,449	13,441	1,462	20,787	7,475	6,467	38,568	22,333	4,923	904	6,259	173	132	9,525

목적 및 배경

- 수능 전후, 입시 해방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등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업주의 법규준수를 계도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민관합동으로 점검·단속 실시

개 요

- 활동기간 : '16. 11. 15.(화) ~ 11. 22.(화)
- 활동지역 : 전국 고등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
- 추진기관 : 총 790개(515개 정부기관, 275개 민간단체)
 -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2개 기관
 -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 등 245개 기관
 - (경찰관서) 지방경찰청(17개), 경찰서(251개)등 268개 기관
 -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75개 단체

방법 및 내용

- 수능일 이전(15~16일)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중심으로 유해업소, 술·담배 판매업소 등에 대한 계도활동 실시
- 수능일 이후(17~22일)에는 기초자치단체(주관), 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으로 위반업소 단속실시
- 주요 활동내용
 -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 PC방·노래방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시간(22:00이후) 위반행위 등

이상기후 대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준비 끝!

자동염수분사 장치 대폭 확충으로 취약구간 중점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하였다.
- (상황실 운영) 국토교통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 (취약구간 관리)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 * 관리대상 취약구간 현황 : 179개소('15) → 191개소('16)
 - 이를 위해 제설제 395,000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하였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 시설도 크게 확충하였다.
 -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

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211개를 배치하였다.

- (통행제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협업추진)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 비축창고를 운영하여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
 - 또한,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면서,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붙임 : 눈길 안전운전 요령 및 참고자료

- ▶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 ▶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
- ▶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
- ▶ 폭설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
- ▶ 눈길,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
- ▶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
- ▶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
- ▶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
- ▶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

참고1

제설인력, 자재, 장비현황

구 분			단 위	계	일반국도			고속국도		
					소계	지방청	지자체 (위임)	소계	도로공사	민자회사
제설작업인원	계		명	4,492	1,993	1,600	393	2,499	2,089	410
	조종원	소 계	"	1,777	925	770	155	852	688	164
		자 체	"	795	340	267	73	455	376	79
		임 시	"	982	585	503	82	397	312	85
	제설원	소 계	"	2,178	952	770	182	1,226	1,074	152
		보수원	"	1,030	541	381	160	489	388	101
		임 시	"	1,148	411	389	22	737	686	51
	기타(지원인력)		"	537	116	60	56	421	327	94
제설 자재	계		톤	394,819	161,680	141,575	20,105	233,139	208,332	24,807
	염화칼슘		"	222,682	32,759	27,350	5,409	189,923	25,633	8,424
	소 금		"	167,048	125,037	112,273	12,764	42,011	181,499	16,378
	친환경		"	5,089	3,884	1,952	1,932	1,205	1,200	5
장 비 총 계			대	4,862	2,410	1,850	560	2,452	2,093	359
주요 제설 장비	계		대	1,477	715	562	153	762	650	112
	제 설 차		"	119	47	34	13	72	52	20
	그레이더	소계	"	27	25	14	11	2	0	2
		보유	"	9	9	3	6	0	0	0
		임대	"	18	16	11	5	2	0	2
	덤프트럭	소계	"	1,337	643	514	129	694	604	90
		보유	"	306	123	83	40	183	157	26
		임대	"	1,031	520	431	89	511	447	64
제설 부수장비	계		대	2,817	1,365	1,040	325	1,452	1,247	205
	제설블로워		"	68	20	19	1	48	44	4
	제설삽날		"	1,448	742	581	161	706	604	102
	습염살포기		"	1,243	548	434	114	695	598	97
	모래살포기		"	52	52	3	49	0	0	0
	노면결빙파쇄기		"	6	3	3	0	3	1	2
상차 장비 등	계		대	344	198	145	53	146	124	22
	보유(로더 등)		"	187	101	76	25	86	71	15
	임대		"	157	97	69	28	60	53	7
기타장비			대	225	133	103	30	92	72	20
도로관리연장			Km	16,050	11,716	8,825	2,891	4,334	3,863	471



해수부, 해양수산시설 겨울철 재난 대응 대책 추진

- 24시간 상황관리 · 단계별 대응, 시설 사전점검 및 보강조치 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시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폭설이나 강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상·재난상황을 보고하고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논의한다. 실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해양수산부가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겨울철 재난 관련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한다.

또한,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과 4개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겨울철 재난 대응 지침을 배포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수산양식시설,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강 조치 등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 한파·대설 등 겨울철 재난으로 인해 해양수산시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연평균 50여억 원에 달한다.”라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등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양수산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 표준화된 재난상황대응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 추진

* 증·양식 시설 붕괴사고(대설), 양식수산물의 한파피해 등

□ 주요 내용

- (상황관리)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강화
 - 대설, 강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상·재난 상황 보고, 단계별 대응전략 등 논의
- (비상근무) 기상 및 피해상황 등에 따라 비상대책반 편성·운영
 - 항만, 수산 등 분야별 비상근무조 편성 및 피해상황에 따른 재난 대응활동 추진
- (분야별 추진계획) 겨울철 취약시설 피해예방대책 추진
 - (증·양식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강조치, 한파피해 예상 시 양식어류 조기출하 유도 등 어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계도 강화
 - (선박통제) 풍랑특보 시 출어선 통제 및 대피유도
 - (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풍 및 월파 등에 의한 해상교량 및 해안도로의 차량과 보행자 통제기준 마련 및 홍보, 해안가 위험지역 안전시설 보완조치 등